

정전사고 관련기관 “엄중경고”

산자부, 한전과 발전3사 문책 요구 ... 안전수칙 미준수에 기술미흡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전 및 원전사고가 설비 운영능력 부족과 유지·보수 기술 미흡, 안전수칙 미준수나 실수 등 제대로 관리하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정전·원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한국전력, 남동발전, 한전기공,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고 관련기관에 엄중 경고하고 간부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요구했다고 4월19일 발표했다.

기관이 정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4월1일 발생한 제주 정전사고는 해저케이블 2번선 손상이 1번선으로 과급되지 않게 분리시켜야 하는 보호계전기가 작동하지 않은데다 제주 내연 1호 발전기의 제어시스템이 오작동해 가동이 정지되면서 나머지 9개 발전기에 과부하가 걸려 전체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첨단 외국산 설비에 대한 운용·유지관리 기술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해저 케이블 손상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근무자의 과실이나 태만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Areva 제품인 해저케이블 보호계전기, 미국 Wood Ward 제품인 제주 발전기 제어시스템 등의 기술적 결함 여부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인지도 밝히지 못해 5월 해당기업 관계자들과 합동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4월7일 여수 석유화학단지 정전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고압선에 근접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월10일 부산 서면 정전사고는 변전소의 가스절연개폐기 고장이 원인이고 3월24일 발생한 대산 석유화학단지 정전사고는 조류 배설물이 송전철탑 절연체에 떨어지면서 송전선로 고장을 유발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4월17일 발생한 고리 원전 3호기 정지사고는 운전원의 기기조작 실수로 인해 발전기가 자동정지한데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4개 기관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와 함께 여수 정전사고와 고리 원전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강력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발전과 한전기공의 여수 사고 책임자가 직위해제됐고 고리원전 사고에 대한 관련자 인사조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자부는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오래 사용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전면교체를 위해 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전력설비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남제주화력 3호기를 6월 시운전해 조기가동하고, LNG발전소 건설 또는 해저 케이블 추가건설 등 제주의 전력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4/21>